

2024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가. 개요

- 주 제: 공공부문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
-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14:00~18:00
- 장 소: 가천대학교 가천관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1. 특별기획세션

- [발 표] 강성조 박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좌 장] 김완희 교수, 가천대학교
- [토론1] 강민철 팀장,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토론2] 김숙진 팀장,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토론3] 박성진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4] 강인재 원장, 재정성과연구원
- [토론5] 정성호 소장, 한국재정정보원
- [토론6] 양영철 본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토론7] 나주영 회계사, 정유회계법인
- [토론8] 김이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 (발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 (배경)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적절성, 사전경보 기능 등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접근 필요

- (필요성) 거시적 측면에서는 예산회계정보와 발생주의정보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검토 필요
- 그 외 재무분석 지표를 토대로 횡단면·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원가 산정을 통한 성과지표 연계의 필요성 검토
- 거시적 측면의 분석
 -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회계책임 등 현행 3개 분야의 30개 재무분석지표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표가 존재하여, 질적 특성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 자산 및 자산 규모의 의미, 부채 규모 및 비율 분석, 부채와 이자수의 및 비용의 의미, 재정운영순원가 보상의 중요성, 미래세대 이전비용 측면 고려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표 1 30개 재무분석지표

재정상태 분야(9개)	재정운영 분야(10개)	회계책임 분야(11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④ 이자수의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⑧ 주민 1인당 민간등 이전비용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⑨ 공무원 주민 1인당 총수익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⑩ 공무원 주민 1인당 총비용
		⑪ 공무원 주민 1인당 급여

- 현행 3개 분야, 30개 지표는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개선된 3개 분야 10개의 핵심지표를 선정
- 개선된 3개 분야는 유동성 분야, 안정성 분야, 재정관리 분야로 구분
 - ① (유동성) 단지 부채 상환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능
 - ② (안정성) 자산·부채의 관리자금 운용과 조달 관련 지표로 기능
 - ③ (재정관리) 수익·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 차원의 지표로 기능

표 2 10개 핵심지표

분야	핵심지표	산식	기존분류
유동성	1.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재정자금×100	재정상태
	2.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100	재정상태
	3-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총자산×100	재정상태
안정성	3-2. 총자산 및 총부채 증감율	(당기자산·부채/전기자산·부채)-1	재정상태
	4.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총부채/총자산×100	재정상태
	6. 미수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금 대손충당금/미수금×100	재정상태
재정 관리	7.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재정운영
	8.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경상수익×100	재정운영
	9.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일반수익 등	재정운영
	10. 재정운영순원가보상률	일반수익/재정운영순원가×100	재정운영

■ 미시적 측면의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실증연구 결과, 재정운영표상 항목별 원가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원가 분석 모델을 제시
- 분석모델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와 접목하고, 프로그램별 운영원가 및 사용료 부과대상 원가를 계산하여, 각 프로그램별 단위당 원가 산출 모델을 제시

■ 재무회계정보의 활용 및 개선

-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미·거시적인 활용방안 제시

표 3 재무정보의 미·거시적인 활용방안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① 과도한 정보량을 줄이고, 핵심지표 중심으로 관리 가능한 지표도출	① 지방재정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됨에 따른 자발적 재정구조 개편(세입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 필요
② 단순한 지표의 산출이 아니라 재정분석 등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②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공공시설 원가 분석을 통해 의존 재원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

표 3 의 계속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새로운 신규지표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자산 노후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계열 등 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예산결산 중심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발생주의 관점에서 단위 사업별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 관리방안 개선 등 추진 	

● 토론내용

좌장 김완희 교수(가천대학교)

-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현재 약 2%로 매우 낮는데, 부채비율을 다소 높더라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절히 마련하면, 신용평가나 감사기능도 확대되어 지자체 재정예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이며, 향후 관련 논의 필요
-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지자체도 공공부문의 부채통계에 대한 국제통계지침인 PSDS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좋은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임

토론 1 강민철 팀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 지자체 간 비교분석의 가능성, 지자체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및 지자체의 발생주의 정보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
- 이를 토대로 기존의 30개의 재무분석지표를 10개의 핵심지표로 개편하였으며, 이 핵심지표가 지자체 간 비교분석에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담당자나 정책결정자들도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유용함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형 간 비교 등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토론 2 김숙진 팀장(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지방정부(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현행 30개 세부지표와 신규 10개 핵심 지표에 대한 중앙정부 활용 가능성 검토
- 재무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표관리 필요
-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은 예산과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금 정보는 1960년대부터 축적되어 있으나, 발생주의 정보는 아직 10년 정도 쌓여서 활용도가 미진함
- 정의 환류를 위해 재정성과평가에 재무정보가 더 녹아들어 갈 수 있는 방법 필요

토론 3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 10년이 지나도 왜 나아지지 못하는가를 고민하지만, 세계적 경향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회계제도를 전환하고 있으며, 약 70% 정도의 나라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확산되고 있음
-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부채비율 등 회계책임정보를 포함한 지표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지표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함. 즉, 재정운영 순원가 등 지표의 숫자를 이용하여 이를 잘 해석하고 어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토론 4 강인재 원장(재정성과연구원)

- 우리나라의 재무유용성은 규범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재무지표의 유용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수정 보완할 방법 필요
- * 2,000개의 원가정보가 있지만, 사업별 유사성이 있어도 사업 명칭이 달라서 활용하지 못함
- * 노후화에 대한 수선유지비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이호조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토론 5 정성호 소장(한국재정정보원)

-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30개 재무분석지표가 실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즉 지자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2%가량 산출되나, 자산의 80% 이상이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 해석에 주의 필요
- 재무제표의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운영차액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정부는 현금흐름표를 신설한바, 지방정부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토론 6 양영철 본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정부 소멸 측면에서 계속기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 효율성 및 존속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주민·공무원 1인당 지표는 10개 핵심 지표에 포함 필요
- 부외부채의 시장이자율을 활용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하여 표시하면 부외부채의 간접적 통제가 가능할 것임
- 지방정부는 상생발전 등 재정효율 대비 형평성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므로 재정 효율성만 중시하는 지표 적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토론 7 나주영 회계사(정유회계법인)

- 지방재정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단기 차입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자금 대비 유동차입 비율 지표를 핵심지표에 추가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
- 국가회계나 지방재정통계자료는 차년도 5월 이후에 공시되는 등 정보의 적시성이 낮으며, 부채지표는 분기·반기에 제시 필요
- 대행사업의 경우, 수입은 지자체 재무제표에 반영되나 비용은 공사공단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필요

토론 8 김이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부채비율을 파악해야 하며 연금개혁, 건보 재정개혁,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논의를 위한 회계정보 생산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II. [정책세션] 국가재무제표 정보

- [발표1] 진태호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발표2] 박성진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좌 장] 성시경 교수, 단국대학교
- [토론1] 심재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토론2] 이계형 연구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토론3] 고경영 센터장, 성현회계법인
- [토론4] 엄기중 교수, 국립순천대학교

● (발표 1) 국가결산 체계 개편 추진 현황

발표자 진태호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 (기본방향)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제공하고, 재무제표 기반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하며,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작성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간소화 및 분류체계 개편, 현금흐름표 신설
 - (주석) 22종 59개 항목으로 확대 및 기존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삭제
- (재정상태표) 분류 체계 개편 및 간소화
 - 자산, 부채의 개별 항목을 장단기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하고,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그룹별로 묶어주는 중간단계 신설
 - * (자산)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부채) 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
 - 재정상태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계정과목을 현행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각 공시 계정과목의 세부사항은 주석에서 상세 공시
 - *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등 차감계정과목을 공시 계정과목에서 삭제

- (재정운영표) 분야별·성질별로 개편
 - (분야별) 분야별 투입 원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예산 15대 분야로 구분 표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 프로그램단위 원가를 통합하여 15대 분야별로 분류
 - (성질별) 수익·비용 측면의 세부 구성 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비용은 재정활동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
- 현금흐름표 도입
 - 현행 총여유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현금주의와의 차이내역만 공시하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활동별 현금흐름 파악을 위한 현금흐름표 도입
 - 현금흐름표는 국가 활동을 운영, 투자, 재무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현금흐름을 파악
 - * (운영활동) 국세수입 등 경상적인 정부운영에 따른 현금유입 및 인건비 등의 현금유출
 - * (투자활동)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유출입
 - * (재무활동) 국채발행, 차입 등에 따른 현금유입 및 국채상환, 차입금 상환 등에 따른 유출
- 주식체계 개편
 -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정보인 필수보충정보(7종)와 부속명세서(12종)를 주식(24종 80개 항목)으로 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정보를 주석으로 상세 공시
 - 국가결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현황 정보를 포함하고, 수익 및 비용 계정과목 등에 대한 설명 확대
- 체계 개편 추진 일정
 - '23년에 현금흐름표 신설 등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법령을 개정했으며, '24년까지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제·개정을 추진 예정
 - '26년 5월, 2025회계연도 개편 결산서를 국회제출 예정

● (발표 2) 공공부문 ESG 공시기준 국제 동향

발표자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기후’ 중점의 ESG 공시 기준 논의
 - 기업 간 ESG 활동 목적이 상이하고, 그린워싱의 발생 가능성과 ESG 정보 표준화를 위한 세분화의 어려움으로 ESG의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모든 구성요소의 공시를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기업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 2015년 파리협약을 계기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를 설립하였음
 - '17년 TCFD는 권고안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경로를 제시하며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및 지표·목표 등 이른바 양파망 구조의 기후변화 공시체계를 주장함. 이는 미국 SEC 기후공시와 IFRS S1, S2⁶⁾ 및 IPSASB 공공부문 기후변화 공시 기준 등의 기후변화 관련 ESG 공시 기준들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음
 - 중요성 측면에서 기업부문의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을 살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후 관련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 ‘단일 중요성’을 강조하는 IFRS S1, S2 및 미국 SEC의 기후공시가 있으며, 환경·사회적 요인 등 폭넓은 외부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 등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공시하는 ‘이중 중요성’을 강조하는 GRI와 EU의 CSRD를 들 수 있음⁷⁾
-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 1) IPSASB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 제정 현황
 - IPSASB에서는 IPSAS와 분리된 지속가능성보고기준(SRS)을 제정하고, 올해 9월에 기후 관련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6)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7)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IFRS S2, GRI 기준 및 TCFD 양파망 모델을 차용하는 등 다른 기준들의 문구를 병렬로 작성하여 하나의 기준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GRI 기준의 영향과 IFRS의 위험과 기회의 범위를 공공부문 보고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공시안을 마련 중임
- GRI 기준 차용 시에는 보고실체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 관련 영향’으로 명시하고, IFRS S2 차용 시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후 변화가 보고 실체의 서비스 제공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임을 명시하였음
- 최근에 IPSASB에서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목적과 4가지 가정을 살펴 보면, 먼저 목적으로는 단기성으로 공공부문 기후변화 공시의 확산과 정부 정책 활동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장기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의사결정 유용성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준수의 기여를 제시함.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4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음

표 4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가정

NO	주요 내용
1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은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국제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들이 국제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3	실체별 정보는 국가수준 정보의 질을 높임
4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기본 틀은 정부의 자체 행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물론 정책 기능에 대한 책임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합치되어 투자자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고, 국제협약 준수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

2)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의 기후 관련 공시제도

- 2021년, FASAB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D 14030)에 따라 유형자산의 범위를 넘어 정부의 대차대조표, 연방정부 프로그램 또는 정부서비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재정위험에 대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함
- 2022년 5월, 기존 미국 연방회계기준을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적용한 Staff Paper를 발간함

- 파리협약과는 별개로, 기후변화가 연방정부의 유형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관심에서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한정하고, 기후변화가 연방정부의 자산, 부채,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인 재무적 중요성만 공시하는 입장을 유지함

-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공시기준 방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후 위기의 비용보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이 현저히 낮으므로 공공 부문의 기후변화 공시 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EU와 같이 이중 중요성을 강조할 것인지, 미국과 같이 재무적 영향에 한정하는 단일 중요성을 채택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토론내용

토론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개념체계의 부재로 '국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결산체계 개편으로 용어 및 순서 변경 시 국민이 이를 이해하기 쉬울지에 대한 의문 존재
- 재무제표보다 결산개요 등 서술적 방식을 이용하여야 정보의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국가결산서 목차상 세입·세출결산서보다 결산개요, 재무제표가 먼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원' 단위 공시가 바람직하며, 결산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작성 책임자, 감사인을 둘 필요가 있음
- ESG 관련 공시는 필수적이거나 공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존재함. 향후 국제적인 지침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세연 등을 통한 교육 제공이 중요함

토론 이계형 연구위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국가 재무제표 간소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며, 지자체의 경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의 큰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현금주의 정보와의 차이 설명의 어려움 등으로 현금흐름표 작성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국가 상황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제안을 고려해 보겠음

- 지자체의 경우 과거에 성과보고서상 장관 사인 추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실무자 측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이 있음
- 일반정부재정통계(GFS)의 경우 개인적 서비스와 집단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단순 분야보다 그룹으로 묶어 원가정보를 제공하면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임

* 개인적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등 개인이 받는 배타적 서비스

* 집단적 서비스: 경제, 사업, 중소기업 분야 등

토론 고경영 센터장(성현회계법인)

-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단일 중요성과 이중 중요성을 양분하였으나, 경계가 모호하므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 논의 필요
- 기후변화 관련 공시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위험관리이며, 공공부문에 적용 시 형식적인 것이 아닌 관리체계, 조직, 절차, 모니터링 지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험관리 필요
- 공급망 전체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여나가야 하므로 공공부문의 공급망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토론 엄기중 교수(국립순천대학교)

- 감가상각누계액은 노후화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시 생략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 현금흐름표 추가는 간소화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세입세출 정보와의 차이점, 보완점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활용도가 있을 것임
- 계량할 수 있는 기후만 공시하는 경우 인식·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사회와 지배구조의 공시도 포함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참고

행사 주요 사진

